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 참여 '저조' 여전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 5천명 계획

10월 시행 예정…표본 부족 두 달 연기

세달간 258명·5.16%…광주 14명뿐

운전자들 "참여 견인할 대책 있어야"

영업용 이륜차의 안전운행 유도와 제도 효과 검증을 위한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이 참여율 저조로 두 달 연기된 끝에 최근 시행됐으나, 당초 계획한 표본 규모의 5%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한국

교통안전본부와 함께 영업용 이륜차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 문제 등을 개선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이륜차 번호판은 후면에만 부착돼 시인성이 낮고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토부는 여러 대안을 모색해 있는데,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다.

전면번호는 금속 재질인 후면 번호판과 달리 스티커 형식으로 발급되는 게 특징이다. 이는 사고 시 충격과 이에 따른 파손 위험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 스티커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지정 정비센터를 통해 배포·부착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전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워드라이브'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다.

참여자는 '라이딩 가디언즈'로 지정돼 보험 할인과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11곳에 등록된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로, 국토부는 최대 5천명을 모집하려고 했다.

그러나 참여율 저조로 국토부는 당초 10월부터 1년간 시행 예정이었던 시범사업 시작을 이달 1일로 연기했다.

연기 전 10월까지 모집된 참여자도 계획의 5.16% 수준인 258명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는데 대구에선 전체의 50%가 넘는 132명이 참여했다.

반면 광주의 경우 참여자가 14명에 그쳤고, 고양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두고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들 가운데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겠냐"는 불만소리가 나온다.

한 배달업 종사자는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까지 등장한 마당에 전면번호까지 달면 다 잡겠다는 건데, 굳이 먼저 나서서 참여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운전자는 "애초에 영업용은 보험료가

비싸 자가용으로 등록하고 배달하는 사람이 많다"며 "안전 개선이 목적이라면 대상자들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는 대책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표본 부족 우려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모집을 이어가는 한편 홍보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 전면번호 시범사업과 별도로 오는 2026년 3월부터 이륜차 전국 번호체계를 도입하고 후면 번호판 크기를 확대하는 개선안을 시행해 단속과 식별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윤진웅 기자



9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영암군 시종면 한 오리농가에서 방역 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초동 대응팀을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영암 오리농장서 'H5형 AI' 검출…방역 비상

도, 살처분·출입 통제 확산 차단 총력

영암 시종면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 지역에선 올해 겨울 들어 첫 H5형 A1 항원이 검출된 사례다.

전남도는 9일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해당 농장에 신속한 초동방역을 마친 뒤 추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농장은 육용오리 42일령 2만여마리를 사육

하는 곳으로 도축장 출하 전 전남도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에서 H5형 AI가 확인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고병원성 여부를 검사 중이다.

전남도는 H5형 항원 검출 즉시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초동방역팀 2명을 투입해 농장 출입 통제와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고, 도 현장 지원관 2명도 피해를 주변 환경조사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또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 살처분을

실시한 뒤 농장 반경 10km 이내를 방역 지역으로 설정해 이동제한과 소독, 예찰 등을 강화했다.

전국 오리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축산차량에는 10일 정도까지 24시간 일시이동증지명령이 내려졌으며 가금농장과 축산 관계 시설은 집중 소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현재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총 7건 (경기 5건, 광주 1건, 충북 1건) 발생했다.

/김재정 기자

검, '마세라티 뱃소니법' 별건 재판서 징역 6개월 구형

변호인 "선임 시간 벌고자 도주"

'도피 공범' 3연속 불출석에 징역

검찰이 지난해 광주 도심에서 20대 연인을 들이받은 후 달아났던 일명 '마세라티 뱃소니법'의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9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24일 음주 상태로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다가 서구 회정동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면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 중 한 명은 숨졌고 다른 한 명도 크게 다쳤다.

이 사고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김씨는 또 다른 지인을 통해 은신처를 제공받아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와 그를 도운 공범 A씨는 앞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도주를 도운 공범 B씨가 이날까지 세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그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변론 절차를 우선 종결했다.

검찰은 김씨와 A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 별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교통사고로 몹시 당황하던 중 변호인을 선임할 때까지 잠시 몸을 피해서 시간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소재 파악 중인 B씨에 대해선 내년 1월 20일 재판을 속행하고 전체 피고인에 대한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안재영 기자

5·18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 '청신호'

보훈부, 10만원→15만원 입법예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9일 국보훈부에 따르면 전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80세 이상 5·18 민주유공자와 그 선순위 유족 1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오는 18일까지 가능하며 국민참여입법센터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보훈부는 보훈 사각지대 해소와 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관련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 보훈 예산도 올해보다 3.7% 증가한 6조 6천 87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 혁명공로수당 등 주요 수당도 함께 인상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 입니다!

-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 신속하고 확실한 A/S
-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품질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최고의 명품 파크골프채
아스트로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